

광주서도 검찰개혁 촛불 집회 열려

금남로5가 일대서 시민 400여명 참여

“국정농단 촛불집회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또 촛불을 들게 될지 몰랐습니다”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광주에서도 촛불을 들었다.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일대에서 광주시민 400여명(주최측 추산)이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여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날 촛불집회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주최 측과 시민들의 지유발언이 이어졌고 서초동 촛불집회 영상을 시청한 후 다양한 공연으로

디채롭게 꾸며졌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지난주 광주지검 앞 집회에 이어 두번째로 학생과 시민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집회를 위해 학생들이 ‘뿐이고’ 노래를 개사해 “검찰개혁 뿐이고”를 열창하는가 하면 ‘헌법1조, 끝까지 간다’ 노래를 열창하며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즐겼다.

이날 문홍 국민주권연대 관계자는 “국정농단이 박근혜와 최순

실만의 문제가 아닌 적폐세력의 농단이었던 것처럼 검찰문제도 단순히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적폐 언론이 유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언론과 정치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우리가 원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온다”고 외쳤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유모씨(48·여)는 “여력이 없어 서초동 끼진 못 갔지만 광주에서라도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집회에 나오게 됐다”며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워낙 거대권력이니 시민들이 끝까

지 촛불을 들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 딸과 함께 네 식구가 모두 집회에 나왔다는 이동식씨(45)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첫 집회다. 또다시 촛불을 들게 될 줄 몰랐는데 과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와서 직접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에 이어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 대전 둔산동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광주 집회도 검찰개혁 촛불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계속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전남 5년간 음주

운전 교사 248명 징계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2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김봉이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았다.

전남지역 음주운전 징계 교사는 174명으로 경기도 394명, 경남 184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전남 징계교사의 징계유형은 강등 1명, 정직 16명, 김봉 82명, 견책 74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광주의 경우 74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별로 보면 해임이 2명, 정직 6명, 김봉 31명, 견책 35명이었다.

조 의원은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인 음주운전 징계는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중 80% 가량이 김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솔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소한 가을전어의 계절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열린 ‘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에서 가을 전어가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 서구 사거리에 ‘시속 30km 단속카메라’…민원 속출

사거리에 30km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민원이 속출하자 경찰이 단속을 강행하지도, 카메리를 철수시키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5월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30km/h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등장했다.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었지만 스쿨존 내도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도입 직전 사거리에 카메라가 설치되자 민원이 속출했다.

서구 주민 박모씨(46)는 “단속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라 급정거를 해 접촉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며 “쭉 뻗은 손으로 차량을 막았지만 차가 도로를 달리다 급정거, 서행해서 위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

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다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35) 역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면 당연히 서행하겠지만 도입 직전 돌발 상황을 만들면 모두에게 위험해 보인다”며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단속을 집중한다든지, 스쿨 존 내로 카메라를 옮기든지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따로 접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단속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카메라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사거리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나온 어린이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기다리지 않고 사거리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막고자 선정된 위치다. 또 신호와 과속 단속을 같이 해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실 경찰 입장이라 단속카메라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물론 하루에도 몇 번씩 출동을 나가며 사거리로 오가는 현장 직원들의 불만은 특히 높다”고 전했다.

뉴스1

전국 철도파업…광주서 800여명 집결

철도노동자들이 철도 안정화를 주장하며 전국 동시다발로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광주송정역에도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했다.

12일 오후 광주송정역 앞에는 전남, 전북, 광주 지역 철도노동자 800여명이 ‘호남지방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여, 철도안정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KTX-SRT 고속철도 통합 △총액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시행 △교번근무기준

개선 △일근임금기준 개선 등을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촛불혁명 이후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약속한 문제인 정부에서 철 철도파업의 의미는 크다”며 “1차 경고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안정화하고 정당하고 의리있는 파업 투쟁이다”고 주장했다.

뉴스1

이슈 패널

‘성폭행 신고’ 의붓딸 살해·유기

계부·친모 ‘징역 30년’ 선고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31)와 친모 B씨(3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후, 1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판결했고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만 12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피해자는 각각 의붓딸과 친딸로 그 누구보다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것이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친모 B씨의

범행지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범행장소와 방법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성폭행 문제 등으로 인해 딸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을 받았고, 살해를 시시했다”며 “치료에 피해자를 태웠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의 친모였지만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범행을 관여한 형태를 볼 때도 반인륜적인 만큼 A씨 뒷지 않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인 C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 C양을 주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성폭행을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건강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숙이는요…
자폐증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제조기발전
자활치료 중인 민숙군

정부 3.0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발달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진단기준에 초점을 둬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출판자 129 | 고객센터 1577-1000 |